

출구 없는 '폐업 국회'

여야 정상화 조건 놓고 평행선 ... 5당 지도부 방미 길

공전 장기화 불가피 ... 민생입법·선거제 개혁 등 현안 산적

국회의 폐업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1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는 것은 물론 2월 중하순의 임시국회 개최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는 야 4당의 요구로 개최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공전만 하다가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16일을 코앞에 남겨두고 있다. 더욱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때문에 2월 임시국회 개최 협상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광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이들은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 등 미국 조야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원외교를 벌이고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현안을 챙기기 위해 국내에 남기로 한 만큼 자연스럽게 이날 중순까지는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애초 여야는 늦어도 오는 18일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18일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 반대하는 정당은 없다. 다만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크고,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어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와 청문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진 사퇴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요구를 모두 일축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한국당·송언석 의원 등을 포함하는 국회의원 전반의 이해충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역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2·27 전당대회를 앞

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다고 비난하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야당에 백기 투항만을 강요한다고 불쾌해하는 구도여서 점점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는 올해 들어 산적한 민생입법 과제 협상의 운도 띄우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정상가동이 난항하고, 올해 1월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도 여전히 헛바퀴만 돌고 있다. 민생입법도 내팽개쳐진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는다. 민주당은 이밖에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2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중점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여당이 '손혜원 국정조사'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5당 지도부 미 출국 문희상 국회의장(맨 왼쪽)이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광영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가 함께한다. /연합뉴스

민주, PK 민심 잡기

지도부, 18일 경남·창원서 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는 PK(부산·경남)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PK 민심을 다잡기 위한 '공들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동진 정책의 교두보로 우뚝 섰던 PK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문제로 지지세가 점점 식어가던 가운데 김경수지사(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는다. 민주당은 이밖에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2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중점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여당이 '손혜원 국정조사'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이 이처럼 PK 민심에 민감한 이유는 이곳의 정치적 의미가 각별하기 때문이다. PK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두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의 염원을 심은 곳이다.

PK에 오랫동안 정성을 들인 민주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하는 성과를 거뒀고, 그 여세를 몰아 내년 총선에서 'PK 약진'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총선을 1년 2개월가량 남겨놓은 현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한국당과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여기에 창원·부산·보령 선거까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민주당에서는 PK 민심 잡기에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전대 대충돌

북미회담 일정 발표에 주자 6명 보이콧 선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심재철·안상수·정우택·주호영 의원 등 6명은 10일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월27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홍 전 대표를 제외한 후보 5명은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한 뒤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동에 불참한 홍 전 대표는 전화 통화로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혀 공동 입장문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대는 2주 이상 연기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12일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6명의 후보는 이날 이후 전대 레이스 관련 일정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면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날짜의 연기가 불가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당선권위는 "선관위가 지난 8일 전대 개최 시기 변경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각 후보자 대리인으로부터 요청사항을 충분히 청취했고,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와 미북미회담 이후 연기할 경우의 장단점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끝장토론에도 ... 바른미래 정체성 갈등 평행선

창당 1주년 연찬회 ... 유승민-호남 중진 입장차 재확인

바른미래당이 지난 8~9일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이후 더욱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창당 1주년을 맞아 정체성 갈등 봉합을 목표로 열렸던 연찬회가 당 노선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당의 숙원 과제인 화학적 결합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총선 전 분열의 길을 걷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7개월만에 공식 행보에 나선 유승민 전 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 자유토론 첫 주자로 나서 "개혁보수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제대로 된 보수 재건

을 주도하자. 특히 낡고, 썩은 자유한국당을 대신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보수 대통합론'도 일정 부분 수긍했다. 그는 "보수가 힘을 합치는 부분은 바른미래당의 지지도와 관계없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평화당과의 통합론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당 출신의 호남 중진 의원들은 유승민 전 대표가 개혁적 중도보수를 강하게 주장한 것과 관련, 이번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며 평화당과의 통합

은 연대 등을 통해 세력 확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우리당이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력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대당 통합이 될지 개별 입당이 될지는 당론으로 채택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이유로도 바른미래당이 보수정당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유승민 전 대표를 직격탄에 이어 평화당과의 통합론에 대해서는 "한국당 전당대회와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이후 국민들께서 정

계개편의 명분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를 지역구로 둔 권은희 의원은 연찬회에서 "유승민의 개혁보수 노선을 지지하고, 이 노선으로 광주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연찬회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오히려 커지는 원심력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미래당과 평화당의 통합파 의원들이 주축이 돼 오는 12일 개최하는 '한국정치발전과 제3당의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당의 통합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며 양당 지도부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평화당 "반드시 정치 개혁"

창당 1주년 기념식

민주평화당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중앙행사장에서 창당 1주년 기념식을 열어 지난 1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기념식에는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정대철 상임고문, 이훈평·박양수 고문 등 옛 동료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동영 대표는 기념사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국내 최대의 정치 이슈로 끌어올

린 것은 평화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치개혁의 열매와 과실을 따 국민 여러분 손에 쥐여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년 중도개혁 정당으로서 다당제의 합의를민주주의를 말할하려는 세력이 맞서 싸웠다"며 "평화당은 넓은 품으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당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2·8 독립선언과 3·1운동 의미를 되새기고자 창당 1주년 기념행사 장소를 독립운동가 등이 수감됐던 서대문형무소로 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형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땅+건물+태양광 = 2년6개월(현금투자회수가능)
선로걱정없는 한국형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읍 잔여분 3기

2019년 10월 준공예정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TWIN STEEL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